

## 농업계 동향

### 낙후된 천일염 산업, 개선 필요

국산 천일염은 2007년 기준으로 약 30만톤이 생산되어 국내 천일염 수요의 약 10% 정도만을 충족시키고 있다. 국산갯벌 천일염은 외국의 암염 등 다른 소금에 비해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알카리성 소금으로 그 품질이 우수함에도 저가로 판매되고 있다. 신안 천일염 산지 판매가격은 200~250원/kg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 가격은 5만~8만원/kg으로 한국산의 200~400배 수준이다. 또한 외국 프리미엄급 소금은 고가임에도 비중이 매년 20% 이상 급증하여 국내 고급 천일염 산업을 잠식하고 있다.

국내 천일염 산업 위축은 생산시설의 낙후, 생산작업의 기계화와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이물질 미처리로 인한 품질안전 미흡, 중국, 동남아 등에서 저가로 수입된 천일염의 국산 둔갑, 전통적인 도매상 중심의 낙후된 유통시스템 등 산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등 외국에서 천일염에 대한 우수성과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어 향후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현재 시장 규모는 1,000억원이나 향후 5년 뒤 1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김치세계화와 연결한 천일염 수요 확대, 낙후된 생산 및 유통기반의 획기적 개선, 작업의 조속한 기계화, 수입소금의 포대같이에 대한 엄격한 규제, 이물질 제거를 위한 대형 가공유통 처리시설 지원, 산지 완전 포장화, 중간 도매상 기능의 축소 등 산업 전반의 획기적 개선이 절실하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1년부터 농지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어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지원기준과 방식 등을 정하는 내용의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중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마치면 농지연금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채무를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밖에도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입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의 임대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임대·매도를 위탁할 수 있는 농지범위를 확대하여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농지연금제도는 운영시스템 개발, 상품설

계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 6월 22일부터 귀표 없는 소 거래나 도축 불가

-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

오는 6월 22일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는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판매되는 국내산 쇠고기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사육단계에 이력추적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6월 22일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2000년대 초 일본과 미국에서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등으로 소비자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 도입 여론이 증가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4~2008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되었다.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회수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6월 22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육농가는 이미 기르던 소가 있거나 새로 태어나면 지역축협 등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에 30일 이내

에 신고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달아야 한다. 또한 소를 사고 팔 때나 기르던 소가 죽었을 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 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식육판매업자는 판매하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거나 판매표지판에 기재하고 판매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이 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 + 무선 인터넷 키)나 이력추적시스템 등에 쇠고기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소의 사육자·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가 도축되어 가공·판매되는 과정에서 둔갑 등 부정유통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NA 동일성검사와 함께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도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DNA동일성검사를 위해 도축장에서 전 두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보관한 후에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 등 지도단속 과정에서 샘플로 시료를 채취하여 동일성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또한 국내 축산물 유통 여건상 사업규모가 적거나 1인 사업체 등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2009.8.31.까지 제도 위주로 지도한 후 본격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유통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어 위생·안전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둔갑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이 한층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연차적으로 소의 혈통, 사양관리, 질병예찰 등 정보와 연계하여 국내 소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 농수축산물 29개 품목 대표조직 설립 · 육성

농식품부는 생산액과 수출가능성이 높은 29개 품목을 선정하고, 이중 쌀을 제외한 나머지 28개 품목의 대표조직 설립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품목은 식량 1개(쌀), 채소·특작 9개(고추, 버섯, 배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인삼, 마늘, 양파), 과수·화훼 6개(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백합), 축산 7개(한우, 돼지, 닭, 계란, 우유, 양봉, 오리), 수산 6개(넙치, 전복, 김, 고등어, 멸치, 오징어)의 총 29개이며, 이중 감귤과 넙치는 이미 대표조직이 설립되어 있다.

쌀은 (사)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을 생산부문 대표조직으로, 농협RPC운영위원회 등은 가공·유통부문 대표조직으로 이원화하여 육성한 후 2010년 상반기에 두 조직을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채소·특작분야는 전반적으로 기존 생산자협의회 중심으로 대표조직이 육성된다. 사과는 과수농협연합회와 사과전국협의회를 통합해 가칭 (사)사과연합회로, 양돈은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대표조직으로 각각 육성한다.

대표조직 설립 계획에 대해 농업인단체 등은 농업환경과 경영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전국조직을 연내에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다양한 여건의 농가나 기존단체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대표조직의 일부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모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표조직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이유로 정부가 생산자 단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기존의 품목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표조직이 설립될 경우 업계의 조직 난립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기존 조직이 잘 갖추어진 경우 그 조직을 대표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는 쌀, 콩, 밀,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값이 주요 생산국의 기상 이변과 소비국가의 수요 증가로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콩값의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콩 1톤 가격이 288달러이던 것이 최근 458달러로 59%나 올랐다.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중국의 소비 증가가 겹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장립종 주요 생산국인 태국이 수매제도의 영향으로 자국 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중립종 주요 생산국인 호주는 가뭄으로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 수출국인 호주는 오랜 가뭄으로 수입을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쌀 중립종 1톤 가격이 작년 12월에 1,150달러이던 것이 최근 1,225달러로 6.5% 상승했으며, 장립종 역시 같은 기간 동안 522달러에서 550달러로 5.4% 상승했다.

밀은 주요 생산국인 미국이 봄밀 파종기에 가뭄으로 파종이 지연되고 냉해까지 나타나는 등 이상기온으로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작년 12월 톤당 180달러이던 것이 최근 238달러로 32.2% 상승하였다. 옥수수도 바이오에탄올 수요는 증가하는 데 반해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격이 톤당 116달러에

서 172달러로 48.3% 올랐다. 작년 애그플레이션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이 큰 이슈가 된 바 있는데 최근 들어 다시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려의 시선이 높아지고 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상반기 농식품 수출실적과 하반기 전망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은 23억 달러(7월 21일 현재)로 전년 동기대비 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세계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주요 식품 수입국의 수입액이 감소하고 수출단가가 하락하는 등 불리한 수출여건으로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신선농식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0.1%)인 309백만달러 수출하였으며 가공농식품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1,215백만 달러, 수산식품은 전년대비 2.2% 감소한 771백만 달러 수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대비 수출액이 증가한 품목으로는 딸기(68.6%), 장미(51.3%), 팥이버섯(240.4%) 등이 대표적이며, 배(-28.6%), 양란(-56.5%) 등은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국가별로는 일본(6.2%), EU(10.0%), 홍콩(8.0%), 미국(4.3%)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러시아(-34.7%), 중국(-16.3%)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상반기 전체 수출액은 감소하였으나 6월 이후에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반전되어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 수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반기 수출이 급감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제주산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재개, 열처리 돈육의 대일 수출작업장 승인 등으로 일본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환율하락, 유가상승과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부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정부는 하반기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박람회 참

가 지원, 해외 유통업체 연계 관촉전 등 기존의 대책 이외에 신속한 검역협상을 통한 수출가능 품목 확대, 신규시장 개척품목 중점 지원, 신규 해외 마케팅 추진, 가공식품 수출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세계 5대 유전자원 강국 실현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외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수집·보존·활용할 수 있는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18년까지 '세계 5대 유전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가용유전자원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하고, 전략적 수집체계 구축을 위해 대학, 연구소, 유전자원 책임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전자원 조사·수집팀을 구성·운영한다. 한반도가 원산지인 토종자원의 반환 추진을 위해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농업기구 및 소속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유전자원 특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의 농업유전자원센터를 정밀평가 중심기관으로 운영하며, 관리기관을 유전자원의 병·충·기능성 성분 등에 따른 분야별 정밀평가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량 및 저활력 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산·학·연 및 유전자원 관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특별증식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래종 유전자원 등 국가 중요자원에 대해서는 DNA뱅크를 구축하여 자원주권 확보 및 생명산업 소재 활용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유전자원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전자원 책임기관에 단기전문가과정을 개설·운영하

며, 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을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유전자원은 생명산업의 근간으로서 현재와 미래의 농어업에 무한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국제적으로도 이를 둘러싼 경쟁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유전자원을 생명산업에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자 동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어촌 공공서비스 제공 기준 마련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공공서비스 제고 방안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안)」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가 주축하고 연구원이 주관하여 이번 공청회는 농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농어업인단체,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농어촌 서비스기준(안)의 항목과 목표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안)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반영, 2010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기준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 서비스기준(RSS)이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 서비스의 항목과 목표 수준으로, 농어촌 주민 입장에서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 의료, 교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의 관련 정책 수립 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농식품부는 도농간 형평성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농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농어촌 주민의 접근실태를 조사

해 그 결과를 토대로 상하수도, 교통 등 주민의 요구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마련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농식품부는 2010년 모두 3곳에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범사업을 벌이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한 후 남은 발효액은 농경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만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연계되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공동자원화 시설 150개를 설치하여 돼지분뇨 550만 톤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중 100곳은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 톤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활성화하고 참여업체의 경제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가축분뇨와 음식잔재물 등이 혼합된 액비를 농경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 공정 규격 등을 개정하며, 가축분뇨법에 의한 액비 기준 변경과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 요건 완화 등을 위해 환경부와의 협의도 진행된다. 또한 국내 가축분뇨 에너지화 전환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된다.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100% 수준을 목표로 사용 원료별 최적 바이오가스 생산기술, 시설의 운전 및 관리 기술, 바이오가스 정제 및 농축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에 대비함과 동시에 대체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㉔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